

# “시장권한 청년과 나눌 것”... 내년 ‘청년자치정부’ 출범

박원순 서울시장 기자회견

정책기획, 예산편성·집행 주도  
4년간 매년 예산 500억원 편성

서울시가 청년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미래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청년들에게 대폭 나눠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를 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자치정부를 통해 청년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된다. 청년청은 정책기획부터 예산편성, 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정집행조직이다. 시는 현재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청년정책담당관(4급)을 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내년 3월 청년자치정부 출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장 직속으로 재편해 신설한다. 청년청 규모는 4개 팀에서 7개 팀으로 늘리고, 청년청을 책임지는 청년청장(4급)은 개방형 직위로 열여섯 전문가를 임명한다.

서울청년의회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민간 거버넌스다. 시는 청년의회를 상설운

영하고 역할을 확대한다. 정책 발굴, 설계, 속의, 결정 등 전 과정에 청년이 참여해 민의와 아이디어를 모은다. 기존에는 연 1회 개최해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시가 수용해 반영하는 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청년자치정부는 기후변화,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권익침해 등 청년세대의 요구가 많거나 가까운 미래에 본격화할 의제, 갈등을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정책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22년까지 매년 500억원을 청년자율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의 만 20~40세 청년은 전체 서울 인구의 31%이지만, 지난 6월 열린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만 40세 미만 서울시의원은 6%밖에 되지 않는다. 박 시장은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모든 위원회의 청년 비율 평균 15% 목표를 조기 달성해 청년들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시는 서울시정 전 영역에 세대균형적인 시각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미래인재DB도 구축한다. 시는 미래인재DB를 통해 시정 참여를 희망하는 각 분야의 청년을 발굴하고 다양한 시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인지예산제를 도입해 서울시 각 실·국·본부에서 예산편성 시 청년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청년청과 사전협의의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시 발주 사업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단체와 마을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년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자치정부 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은 올 하반기 청년자치정부의 동력이 될 인프라와 의제를 마련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4년간 서울청년의 회와 함께 청년정책을 만들어 오면서 우리 청년들이 기회만 주어진다면 어느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서울시와 청년이 만들어 온 정책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었다”며 “이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나눠 서울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메르스 직접접촉자 10명 자택에 격리

서울시, 총 21명 중 서울거주자 대상  
일대일 전담공무원 지정 2주간 관리

서울시는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방역대책반을 구성,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가 메르스 확진자 A(61) 씨의 입국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지난 10일 오후 6시 기준 밀접접촉자는 21명, 일상접촉자는 41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밀접접촉자는 10명, 일상접촉자는 166명이다.

밀접접촉자는 강남구(3명)에 가장 많았고, 강서·송파구 각 2명, 서초·성북·양천구에 1명씩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상접촉자 거주지는 중구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 22명, 용산구 15명, 종로·마포구 각 13명, 송파구 11명, 노원·영등포구 8명 순으로 집계됐다. 금천구와 강북구에는 일상접촉자가 없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11일 오후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메르스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시는 해당 자치구를 통해 밀접접촉자를 관리한다. 자치구는 일대일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자택 격리하고, 1일 2회 상황을 확인한다. 최대 잠복기인 2주까지 집중 관리한다.

일상접촉자도 밀접접촉자 수준으로 감시한다. 자치구 감염병조사관을 활용해 확진자와 접촉 개연성을 파악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일대일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1회 이상 유선으로

상황을 체크한다. 시는 일상접촉자 중 증상을 보이거나 검사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립병원 등을 통해 검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중동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의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추가 감염자 발생에 대비해 주의 단계를 경계 단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방역대책본부 5개 반을 안전대책본부 11개반으로 확대하고, 필요한 물품은 선조치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중앙정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서울시와 잘 소통하며 합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확진환자 외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韓-인니, 청년 문화·인적 교류방안 논의

박원순 시장-조코 위도 인니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1일 양국 청년들의 문화·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박 시장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을 함께 산책하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효과적인 교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우호관계를 나타내는 글자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박 시장과 위도도 대통령은 산책 도중 양국 청년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이들이 묻는 양국 청년 문제에 대해 답을 하기도 했다.

청계천 팔삼담에서 동전을 던지면서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과 공동 번영을 바라기도 했다.

박 시장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5월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박 시장이 아세안특사 자격으로 자카르타를 방문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다. /김현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국빈 방한 중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부인 이리야나 여사가 11일 오전 서울 청계천에서 산책을 즐기며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서울시와 자카르타주간의 교류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옛말에 처음 만나면 낯설고 두 번째 만나면 익숙하고 세 번째 만나면 오랜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다”며 “오늘로 세 번째 만난 대통령님과 특별한 우정이 오늘 모인 한국, 인니 청년들에게 확산되어 양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119구조대, 하루평균 50.8명 구조

서울소방재난본부, 상반기 통계 분석  
8만6415건 출동... 화재 3213건 발생

올해 상반기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접수된 119 신고 건수는 총 109만1900건, 하루평균 603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일 ‘2018년도 상반기 화재 등 소방활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119 신고 접수 건수는 2016년 101만2589건에서 2017년 108만6233건, 올해 109만1900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화재의 경우 상반기 3213건이 발생해 201명(사망 32명, 부상 169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989건보다 224건(7.5%) 증가한 수치다. 인명피해도 전년 동기 135명(사망 24명, 부상 11명)보다 66명(48.9%)이 늘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에서 1333건(41.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비주거시설 1205건(37.5%), 기타 438건, 차량 211건, 임야 24건 순이었다.

〈전년 상반기 대비 화재 건수와 인명피해 현황〉

구분	화재발생	인명피해(명)		
		계	사망	부상
'18년 상반기	3,213	201	32	169
'17년 상반기	2,989	135	24	111
누계 대비	건수	224	66	58
	비율(%)	7.5	48.9	52.3

자료=서울시

인명피해 사망자 32명 중 21명은 주거 시설에서, 11명은 비주거 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가 18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적 731건, 미상 262건, 방화(의심) 103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119 구조대는 올 상반기 8만6415건 출동에 9201명을 구조했다. 하루에 50.8명을 구조한 셈이다.

119 구조대 출동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6만3298건에서 2017년 상반기 7만5306건 출동했다.

출동 유형별로는 잠금장치개방이 81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승강기 갇힘 4105건, 교통사고 3678건, 자연재해 3219건, 수난 1096건, 산악 606건, 추락 341건, 붕괴 134건, 기계 128건, 약물 116건, 폭발 64건 순이었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올 상반기는 화재·구조·구급 등 전체 소방활동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며 “119 신고 전화는 화재나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긴급한 경우에만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서울시, 1468대에 대당 20만원 지원

서울시는 시내 어린이집 통학버스 1468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아동이 어린이집 통학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 해당 사실을 알려주는 장치다.

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총 1538대 중 사전에 신청한 어린이집 차량 1468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 국·시비 5:5 매칭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부담금은 없다. 통학버스 1대당 최대 20만원의 국·시비가 투입된다.

장치는 ▲운전기사가 아이들이 내렸는지 확인한 후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벨을 누르면 ‘벨’ 방식 ▲운전기사가 스마트폰

으로 차량 내·외부 단말기에 갖다대면 경보음이 해제되는 ‘NFC’ 방식 ▲아동이 단말기 비콘(Beacon)을 소지한 채 통학버스 반경 10m 접근 시 이를 감지하는 ‘비콘’ 방식 등이 있다.

시는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 공무원의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자체선정심의회를 구성해 심의결과에 따라 장치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미숙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로 영유아의 안전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등·하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안심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